

# 장수시대의 도래와 도시퇴직자의 농촌 정착 가능성

김동길/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자본주의 미래>

지금까지 유라시아에 농인복지제 또는 선진 산과 사회는 일한 것도 없고 우리와 국민 연금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재정적인 측면이나 기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주 미약하고 후진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20~30년 후 동안은 선진국이 겪게 될 노인복지체계의 위기를 겪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30년이 지나 그 후부터는 이제 겨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국민연금 제도조차도 근본적으로 휘청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실제로 벌써부터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서 사학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뼈격거리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지난 97년 기금 규모가 6조2천억원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고 이대로 두면 2005년에는 총 10조 가량

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2000년 10월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근무했다라도 50세가 넘지 않으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새로운 조치를 담고 있다.

1960년의 공무원연금법은 애당초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 부담률을 낮게 책정해서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선심으로 “저부담 고지급” 형태로 설계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동안 연금 수혜자들은 후배들의 부담을 담보로 큰 혜택을 누리 온 셈이다. 더구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연금 수혜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공무원 연금의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험의 개혁에 정부가 뒤늦게 나서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들 사회보험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혁될

지 두고 볼 일이지만 이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은 심각하다. 그만큼 첫 단추가 한번 잘못 끼어지면 사안은 이처럼 어렵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국민연금만 해도 현행의 틀을 유지하면 2030년에는 당기 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분석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 실시를 전격적으로 시작한 지 불과 몇 연도 안돼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장수 사회의 도래를 감안하면 지금의 연금제도를 포함한 각종 노인 복지 제도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미봉책이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7% 정도이나 이것이 20년이 지나면 14%, 30년 후에는 20%가 된다. 이 같은 노인 인구의 증가율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수치이다. 더구나 노인 인구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잡으면 인구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 견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세기초 우리나라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35세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거의 75세에 달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평균 수명의 연장 속도보다 훨씬 빠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 중에서 고령자의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난 40년간 우

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75세 미만의 인구는 1.31배 증가한 것에 비해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장수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계청이 잡은 보수적인 수치만으로도 1995년에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0.8%인 38만명 정도이던 것이 2000년에는 1%, 2010년에는 1.6%, 2020에는 2.6% 그리고 2030년에는 3.4%가 된다. 그러나 말할 것 없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앞으로 통계청이 예측한 숫자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계청의 자료에는 앞으로의 노인 인구의 생활 양식의 변화라든가 의술과 생명 공학의 발달에 따른 인간 수명의 연장 가능성이 별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었다. 1960년대 이래 경제 성장률의 제고를 위한 인구 성장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온 결과 1970년에 4.53명이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83년에는 2.1명, 그리고 15년 후인 99년에는 1.42명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출산율 저하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것이다.

일본이 2.1명에서 1.4명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30년이 걸렸고 네덜란드는 29년이나 걸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대로 가면 출산율이 더 줄거나 1.4~1.5명대에서 머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낮은 출산력이 장기적으로 노동력과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96년의 출산율 1.8명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2018년부터 노동력이 감소하고, 2028년부터는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실제로 96년의 출산율이 더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2020년부터 총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인구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젊은 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날로 가속화되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앞으로의 노인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노인 인구가 14%에 달하는 노령사회에 접어들 때쯤에는 젊은 사람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제기되는 사회불안과 세대간의 갈등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그 심각성을 더해 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부딪히게 될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이 같은 인구 변동의 추이를 고려하면 필경 우리도 지금의 선진국이 추

진하고 있는 것처럼 연금이나 기타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노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정년 연령을 뒤로 늦추면서 노인도 일할 수 있는 경제 구조의 변혁과 고용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3. 장수시대에 대비한 개인적 차원의 대응과 귀농의 가능성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언젠가 경제 제도와 고용 구조의 변혁을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노동 시장에 재편입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느날 우리는 80대 아니 90~100세의 배고픈 노인 신세에 직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대응은 항상 지체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노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농업 사회와 산업 사회의 중간에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자녀에 의한 노후 보장을 상실하기 시작했면서도 연금이나 기타 노인 복지 제도에 의해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공중에 떠버린 세대이지 않은가. 이들은 젊은이들에게서 외면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쓸모 없는 세대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에 대해 자녀 세대나 국가를 탓할 수반도 없는 노릇이다. 가난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급박하게 추진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지금의 노인 세대들은 자녀나 사회 어느 쪽에 의해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의 과도기적 희생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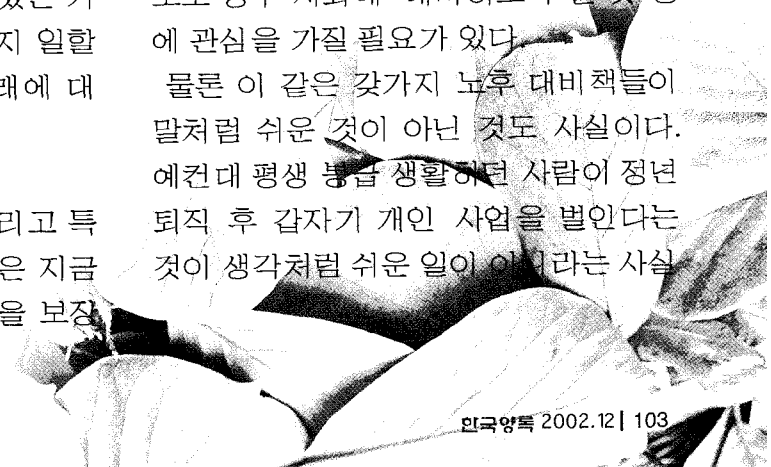
그렇다면 미래의 노인들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서구사회가 그랬듯이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효력을 발생하는 얼마간의 기간에는 어느 정도 복지 혜택을 받고 비교적 안정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해 왔듯이 이러한 연금 제도에 의한 노후 생활의 보장도 한시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적어도 지금 형태의 연금 제도에 의해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30~40년쯤 지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러한 미래의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들은 노동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개인 저축이나 노후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축적을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앞으로, 그리고 특히 한 세대쯤 지난 뒤의 노인들은 지금의 복지 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을 생각은 아예 버리고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지금의 예비 노인들은 이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미 앞에서 소개한대로 서구 산업 사회의 전문가들이 오늘날의 예비 노인들에게 제시하는 충고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노년기를 앞둔 사람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제각기 장수사회에 대비하는 자세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후를 대비해 근로자들은 최대한의 저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은퇴할 생각을 접어 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이를 잊고 일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노후의 소득 확보를 위한 노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 그리고 봉급 생활자로서의 지위를 지켜나가기 힘든 경우 또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개인 창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이나 아예 그러한 일에 투자할 능력이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라도 지으며 자기 생계를 꾸려 나가겠다는 각오로 장수 사회에 대비하도록 할 것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같은 갖가지 노후 대책들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평생 봉급 생활하던 사람이 정년 퇴직 후 갑자기 개인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노후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 동안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도 예측되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미국의 맥킨지사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에서 560만 명의 실질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지속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와 구조조정으로 2010년까지 이직자가 1,250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급속한 정보화의 진행과 이에 따른 새로운 지식, 정보 사회로의 진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직종의 급격한 쇠퇴와 새로운 지식 산업의 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 같은 사회 변화의 와중에서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나 이와 관련된 노인 복지 정책의 수립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문제의 해결을 자녀나 기타 가족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취해왔고 따라서 고령자의 취업 문제는 젊은이의 실업문제나 장애인 실업 문제에 비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노인들이나 미래의 노인들은 국가나 사회의 지원에 큰 기대를 걸지 말고 노후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노인들을 포함한 도시 퇴직자들이 퇴직 후의 긴 세월을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가의 어려운 질문과 관련해서 귀농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노후 또는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정년 퇴직 후 길고 긴 나머지 생애를 주체적이면서도 보람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산활동에서는 은퇴할 생각은 접어두고 할 수 있는데까지 나이를 잊고 일해야 한다면 많은 퇴직자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아예 농촌의 고향이나 자신의 조건에 맞는 농촌지역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어쩌면 유일한 노후대책의 길일지도 모른다.

물론 도시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서 정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며 또 농사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특히 도회지에서 신체 노동이 아닌 정신 노동의 업종에 종사해 온 사람들에게는 농사짓는 일이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장수 시대를 고려하면 많은 도시 퇴직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미 이 점에 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밝혔지만 급속한 사

회 변천과 지속적인 정보 산업의 확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미래의 사회에 대비해서 퇴직자나 노인들이 지속적인 소득보장의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사일에의 종사라는 것은 작게는 최소한의 호구지책으로, 그리고 넓게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뜻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큰 규모의 농업 경영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점은 농촌에서 일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꾸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옛날에 식량이 부족하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은 하다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밥은 굶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점차 길어지는 노후를 파고다 공원에서 소일하면서 의존적인 삶으로 엮어나가는 일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미 앞에서 자세히 밝힌 대로 인간 수명의 대폭적인 연장과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노동 인구의 상대적인 감소는 앞으로 노인들의 삶은 노인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인류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수시대에 이미 들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노인들은 일반인들의 고정 관념

이 가르치는 것처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렇게 허약하거나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최근의 조사들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들 가운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모두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62~64세 연령층의 84%, 65~68세 사이의 80%, 69~74세 사이의 연령층의 78%가 자신들의 하는 일의 양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작업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테면 1998년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인들 가운데 일상 생활의 주요 활동에서 제한 받고 있다는 노인은 8.9% 밖에 되지 않고, 7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서도 이들의 비율은 26% 미만이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노인들 가운데 다수는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들이 생산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의향"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끝으로 한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양록**